

다문화가족지원 정책방향 및 사업내용과 향후 개선방안

김민선 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서론 - 들어가는 말

요즘 우리 사회 일각에서 쏟아지는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다문화 광풍'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연예방송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국적의 미녀들이 출연하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초대하여 그들의 삶을 조명하기도 한다. 또 시사프로그램에서는 행방을 감춘 아내를 찾아다니는 국제결혼을 한 남편의 분노와 애환을, 때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되거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어린 동남아의 신부들의 처절함 등을 접하게 된다. 이것은 방송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몇 년간 갑작스럽게 다문화관련 주제의 학술세미나, 정책포럼, 토론회 등이 과도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다문화 광풍' 속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소위 '다문화가족'을 많이 만나고 접한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문화적응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봄소풍, 나들이 등의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할때는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시댁식구들도 만날 수 있다. 필자는 어쩌면 '다문화 광풍'의 한복판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현실로 엮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정으로 시·군·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방향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여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서비스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방향 및 사업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 다문화가족 정책방향 및 사업내용

2.1 현황

국제결혼의 지속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가족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전체결혼의 11.0%(36,204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기준으로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144,385명(이중 여성이 128천명, 88.4%)으로 나타났다.

표1
국제결혼이민자 현황
(08.5, 행안부)

			결혼 이민자						자녀현황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44,385	16,702	127,683	102,713	13,711	89,002	41,672	2,991	38,681	58,007	29,837	28,170

- 2008년 5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44,385명으로 2007년도에 비해 13.7% 증가하였음.
- 결혼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지역(53%)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는 여성이 88.4%를 차지함.

표2
국제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08.5, 행안부)

구분	계	중국	중국 조선족	베트남	일본	대만	필리핀	몽골	태국	기타
계	144,385 (100%)	33,667 (23.3)	55,789 (38.6)	21,150 (14.6)	6,464 (4.4)	3,805 (2.6)	7,826 (5.4)	2,054 (1.4)	1,843 (1.2)	11,787 (8.1)
국적 미취득자	102,713	22,683	32,466	19,660	5,994	3,341	4,716	1,855	1,644	10,354
국적 취득자	41,672	10,984	23,323	1,490	470	464	310	199	199	1,433

표3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09, 통계청)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혼인건수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국제결혼건수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국제결혼비율	5.0%	8.2%	11.2%	13.5%	11.7%	10.9%	11.0%

이것은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출생성비의 격차, 농촌도시 인구가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에 따른 여성독신자 비율 증가, 세계화로 인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감소, 가치관의 변화 등이 국제결혼의 증가 원인으로 파악된다.

대다수 결혼이민자들은 언어·문화적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간의 갈등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한 바 있다. 2008년 11월 법무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어 때문에 불편했던 점은 '공공기관에서 업무 볼때 (33.3%)', '가족과의 의사소통 등' (28.7%), '자녀훈육 및 숙제지도할 때' (15.9%)로 나타났으며, 2006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률은 34.2%이며, 미취업 여성 결혼이민자의 80%이상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2006년 약25천명에서 2007년 약44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약 58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연령비율로는 6세 이하 57.1%, 만7~12세가 32.2%로 영·유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녀의 언어(한국어) 발달, 보육시설·학교 등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4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08.5, 행안부)

구분	계	만6세미만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학생수	58,007명	33,140명	18,691명	3,672명	2,504명
비율	100%	57.1%	32.2%	6.3%	4.3%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 및 안정적 가족·사회생활을 위한 정책적요구가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서비스 마련이 시급하다. 2008년 11월 법무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 및 민간 지원서비스에 대해 '혜택 받은 적 없다'가 62%인데 반해, 전체의 77%가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희망자가 원하는 서비스로는 한국어교육(40.3%),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29.3%)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증가는 다문화 자녀의 증가와 연관이 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요구가 대두되면서 한편으로는 가족해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자녀양

육 및 결혼이민자보호의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제이혼건수는 2008년 11,255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5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09, 통계청)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이혼건수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외국인과의 총 이혼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총 이혼대비 구성비	1.2%	1.2%	2.4%	3.3%	4.9%	7.0%	9.7%

2.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배경 및 내용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 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2008년 9월 22일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 배경으로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사회적응·직업·가족교육 등 교육지원이 있으며 둘째,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실시 및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넷째, 다문화가족 현황 파악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3 다문화가족지원 주요정책

다문화가족 초기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정책이 있다. 다문화가족 초기 사회적응이라 함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습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 초기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중요하여 그에 대한 서비스가 요구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집합·방문·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준별로 세분화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센터 접근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 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있다. 또 초기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시범사업(38개 센터) 실시를 통해 통

역요원(결혼이민자 활용) 양성 및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시킬 예정이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강화 정책이 있다. 이는 앞서 논의된 바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증가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대가 현재 6세 미만의 경우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가 시급하다. 이에 대한 정책적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학습능력 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보육시설 등 파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별 교육강사를 양성하며, 이중언어 프로그램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 가정 내 부모의 양육능력 향상을 위해 아동발달주기와 가정환경을 고려한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을 지도하는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방문교육사업을 통합·연계하여 가정 내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경제·사회 자립역량 강화 정책이 있다. 이에 대한 정책으로 나타나는 사업으로는 농촌거주 결혼이민자의 농촌사회 정착을 위한 영농기술교육기관 및 과정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강사, 원어민 외국어강사 및 통·번역사 등 이민자 적합직종 개발 및 일자리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 사회자립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대상별, 기능별로 활성화하고, 결혼이민자의 자원봉사활동 개발, 학교 학부모활동 참여 지원 등을 강화시켜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기반의 체계화를 들 수 있다. 그 내용으로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지원 대표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다양한 정보 콘텐츠 제공 및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데 있다. 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켜나가고자 한다. 2009년 센터수를 20개소 증설하여 80개소에서 100개소로 증가된 상태이며 전담인력을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였다.

24 사업내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크게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사업, 방문사업, 영농기술교육사업, 통·번역 서비스 사업,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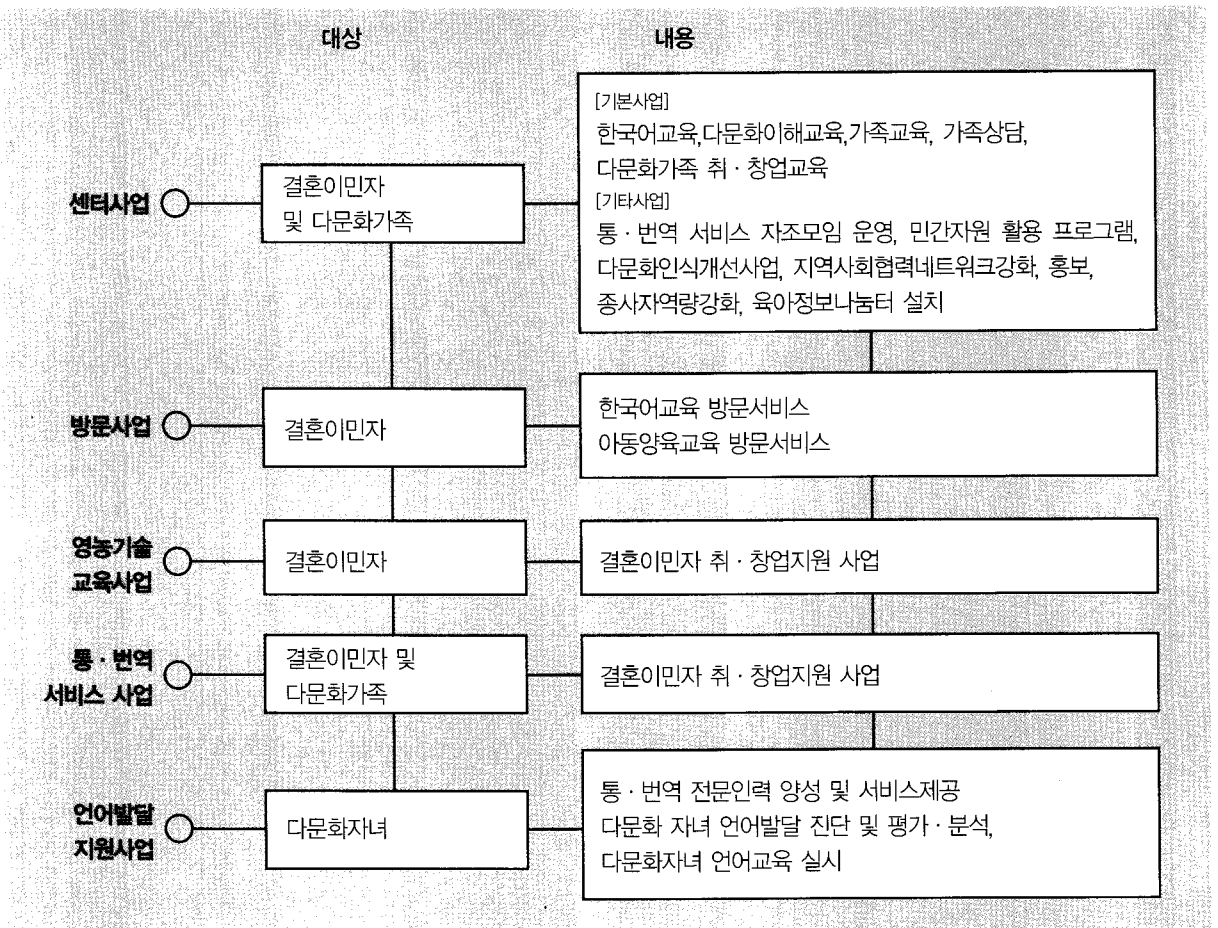


표6 사업내용

이러한 사업내용은 앞서 살펴본 다문화가족지원 주요정책의 목적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한국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가족교육, 가족상담 등이 실시되고 있다. 또,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을 위한 교육과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둘째, 센터를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어교육과 아동양육교육을 방문서비스로 실시하고 있다. 셋째, 영농기술교육사업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농촌사회 정착을 위한 취·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넷째, 통·번역 서비스사업으로 결혼이민자의 취업처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진단 및 평가·분석을 통해 다문화자녀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적응력향상과 다문화가족간의 화합 및 통합, 다문화 자녀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

적 자립이 주요 골자임을 알 수 있다.

3. 결론 - 향후 개선방안

앞서 살펴본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및 사업내용을 포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10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을 수립하였다.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역량강화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구축·제공하고, 가족해체시에도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구축·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욕구를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겠으나, 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민자의 수가 전체 결혼이민자의 20%내외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보완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은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그들이 개인적 자원과 비공식적 지원체계에만 의존하는 것을 탈피하여 사회서비스 기관 등 공식적인 체계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 기관은 문제의 다양성에 대해 포괄적인 서비스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사회로의 통합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체계로서 해결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연결중심성 혹은 근접중심성이 높았던 남편 및 남편 친척 혹은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와 가장 가깝게 존재하는 한국인 이웃에게까지 필요한 서비스 및 정보를 확대하고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보완책으로는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각지대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단지 국제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와 관리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보호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이나 위기 상황 시 자신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만 알아도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제결혼한 이주여성들의 주요 국가의 부에로 생활정보 책자를 발간하고 있지만, 이 정보 책자를 받아보지 못한 이

주여성들도 상당수이다. 새터민이 3개월간 하나원에서 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입국을 고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모국어로 만든 생활정보 책자를 배포하고, 이 책자들도 기본 정보교육을 받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형태는 초혼 이외에도 이별과 사별한 경우의 재혼도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혼의 가정은 가족구조, 관계, 역할의 변화,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양육의 문제 등이 초혼의 가족보다 복잡하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가운데 한국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문제나, 역으로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가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므로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가족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계청(2007)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혼 실태를 볼 때 이혼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매우 시급하다. 이혼 후 자녀양육 문제, 위장결혼 등으로 인한 남편의 심리적 상처 및 후유증, 단독 가구가 된 이주여성들의 빈곤 문제 등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셋째, 인종 및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중국, 몽골, 베트남 출신의 이주여성들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과 가족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문화 이해 및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이해는 각 민족과 인종마다 차이가 있어서 획일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가족을 지원해온 지역의 시민단체나 교회 등의 축적된 실천지식과 기술들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것들이 문화적 민감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각 문화권의 결혼이민자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관점에서 수용될 수 있는 문화적 능력을 갖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을 서비스의 대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에 대한 서비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새터민, 이주노동자, 난민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 역시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하여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2009), "다문화가족지원 정책방향".

최승희(2008), "심층분석1_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실천 및 정책제언", 복지동향(2008.7).

이용재·배화숙(2007),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및 정부의 접근성어 관한 연구".

